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0
----------	------

발의연월일 : 2024. 7. 17.

발 의 자 : 이재정 · 박지원 · 이기현
안태준 · 남인순 · 홍기원
민병덕 · 위성락 · 임호선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6조의7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다.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의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7(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사실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실종자의 수색
3. 사상자·주취자 등의 신원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
4.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50조의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6조의7(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u>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u></p>
<u><신 설></u>	<p><u>제16조의8(사실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u></p>

제50조(벌칙) (생략)

<신설>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실종자의 수색
3. 사상자·주취자 등의 신원 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
4.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0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0조의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p><u>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u>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u> <u>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u> <u>역에 처한다.</u></p>
--	---------------------------------------------------------------------------------------------------------------